

K-방산, '100억弗 수출' 장전... '공급망·신뢰' 탄약 채워야

'4대 방산강국' 도약

전차 등 첨단무기 공급국 자리매김
'신속납기·합리적 가격·고성능' 주요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해야"

수출 100억달러 돌파가 가시화되며 'K-방산'이 한국 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업계는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투자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술력 못지않게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완성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약 69억달러로 전년 동기(55억달러)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하반기 추가 계약을 감안하면 연간 100억달러 돌파는 무난할 예정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6~2020년까지 30억달러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1년 73억달러, 2022년 173억달러로 급등했다. 이후 다소 조정기를 거쳐 지난해 100억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공-II 지대공 유도무기

/LIG넥스원

이 같은 급성장은 국제 정세 변화와 맞물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확대 등으로 각국이 전력 증강에 나서며 방산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은 '신속 납기·합리적 가격·검증된 성능' 3박자를 앞세워 시장을 넓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로 유럽·중동을 공략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전투기 수출로 동남아 시장을 확대했다. LIG넥스원과 현대로템도 미사일·전차 체계 수출로 '4대 축'을 형성했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성장의 밑거름

이 됐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차·자주포·전투기·미사일 등 5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금융보증, 전시회 참가, 수출입은행 지원 등을 병행하며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무기 수입국'이던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공급국'으로 위상을 바꿨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택하면서 방산 강국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항공 우주 R&D(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예산

을 투입해 미래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방산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K-방산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R&D만큼 신뢰기반인 세일즈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산이 내수를 넘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산인력 부족, 부품 공급망 불안, 해외 서비스망 미비 등이 발생 할 경우 신뢰가 흔들려 수주가 끊기 가능성이 높다.

방산 전문가는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R&D·세일즈·신뢰의 삼박자가 맞춰질 때 K-방산의 다음 단계가 열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세일즈' 출국길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제조기업 68% "韓·中 기술격차 사라져"

상의 韓·中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
제조속도 등 제조업 격차 축소 응답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 제안

'대륙의 실수'라 불리던 중국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제조업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과 생산 속도에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인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370곳 중 '한국이 중

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은 32.4%에 불과했다. '기술 차이가 없다'는 답이 45.4%, '중국이 앞선다'는 응답은 22.2%로 조사됐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응답이 89.6%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7.2%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가격 경쟁력은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했으며,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이 53%로 과반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에서 중국산이 특히 저렴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 무역센터(ITC)에 따르면 중국산은 한국산 대비 메모리 반도체 65%, 리튬이온 배터리 73%, 철강(후판) 87%, 면 소재 섬유·의류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앞섰다. '중국이 더 빠르다'는 응답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중국은 유연한 규제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이런 격차가 이어질 경우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69.2%)은 '향후 3년 내 중국 산업 성장으로 한국산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한·중 기술역전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한국의 역진적 세제 구조를 지목했다. 중국은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한국은 세액공제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투

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대기업 15%에 불과하며, 연구개발비 공제율도 대기업 2%로 낮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직접 투자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펀드 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로 미래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은 'N분의 1식 지원'이 아닌 '몰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력 확보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에 있는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2만 6천개소)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현장밀착형 산재예방 활동

주요 내용

- 1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상시관리
- 2 가용인력 총동원하여 사업장 **불시 점검**
- 3 5대 중대재해* 및 폭염분야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즉각시정 ▶ 미이행시 엄단**

*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